

### 국가별 동향



## 영국

### 도살장에 CCTV 설치 필수



영국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환경부 장관은 동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도

축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 23일에 발표했다. 이 제안은 영국식품규범청(FSA)의 공식 수의사(OV)에게 동물 복지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영상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수의사협회(BVA) 존 피쉬윅(John Fishwick) 협회장은 “의무 CCTV 설치는 동물복지에 관심을 끌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2018년 5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 기업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The Poultry News]



## 미국

### 절도가 아니라 구출?



미국 톤턴 지방법원에 닭 절도 혐의로 2명이 법원에 출두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은 양계 농장에서 7마리의 닭을 훔쳐 재산을 훼손했다. 농장 주인은 그들이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절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용의자들은 닭들은 훔친 것이 아니라 구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장이 배설물과 사체 냄새로 진동했고 닭에게 폐렴이 의심되어 근처 연못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들이 농장에서 닭, 오리, 토끼를 훔쳐 연못에 풀어 준 것은 인정했으나 그들의 주장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는 3, 4월에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다.

[Turn to 10]



## 중 국

### 미국산 닭고기 관세 철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부과해 온 반(反)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달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20일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낮추도록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WTO가 미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주면서 중국은 2014년 관련 세율을 4.2%(상계관세)와 73.8(반덤핑 관세)로 낮췄다. 중국 상무부는 2016년 8월 22일과 9월 26일 반보조금·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했었다. [이데일리]



## 사우디아라비아

### 가금류 자급 60% 달성 목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향후 5년간 국내 가금류 생산의 60%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50%를 자급하고 있다. 미국 농무

부(USDA)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SA)은 현재 79만 메트릭톤의 가금류를 수입하지만, 자체 생산량은 76만 메트릭톤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내 가금류 생산을 위해 사우디 정부는 수입 가금류에 대한 관세를 5%에서 20%로 인상하고 수출에 533달러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동물 사료 보조금과 가금류 구매에 대한 환급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민간 부문에서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하루에 1백만의 육계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Global Islamic Economy Gateway]



## 브라질

### 육류회사 BRF '부패고기 수사'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부패고기' 수사 확대가 프랑스 등 EU의 일부 국가들에 EU-메르코수르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 5일 BRF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회사 관계자 5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27명을 강제 구인했으며 11명을 체포했다. BRF는 부패한 고기에서 냄새를 없애려고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다. 제품은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고 수출됐다. [The poultry site] 양계